

# 광주·전남 학교 방사능 대비훈련 뒷전

학벌없는 사회, 한빛원전 연이은 사고 발생 불구

초·중·고등학교 재난대비 훈련 매우 미흡해

원자로 6기가 밀집해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사고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 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과 핵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행동이 교육부로부터 재난 대비 훈련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618개 초·중·고에서 실시된 각종 재난훈련

은 학교당 평균 9.38회에 이르고, 이 중 방사능 재난 훈련은 0.17회에 그쳤다.

전남 역시 1388개 초·중·고에서 학교당 6.07회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사능 재난 훈련은 0.06회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모두 연간 학교당 방사능 재난 훈련이 단 한 차례도 안되는 셈이다.

광주의 경우 재난대비 훈련 실적이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지만 방사능 재난대비 훈련 실적은 원자

력발전소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남은 한빛원전이 영광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없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 훈련 실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여 명령이 숨진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조작실수로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 원자로 재어붕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규제 등 한빛원전에서 여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학생 뿐 아니라 시·도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며

“교육 당국의 안전시행계획이 있지만 그저 텍스트에 불과하며, 어쩌다 학교에서 방사능 재난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하듯 대피해 학생들이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며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수십만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규 기자

구례군 왕벚나무 조기

낙엽 ‘구멍병’이 원인

최근 2년 간 구례군에서 발생한 왕벚나무 조기낙엽 현상은 구멍병 감염 때문으로 판명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구례군 왕벚나무의 조기낙엽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왕벚나무로 유명한 지역 중 단풍 시기와 유사한 제주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멍병은 벚나무와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 과일나무류에 많은 병해다. 곰팡이 또는 세균에 의해 잎에 작은 갈색반점이 생기다가 구멍이 뚫린다.

구례군에서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산림 내부를 제외하고 왕벚나무를 심은 전 구간에서 정상적인 시기보다 잎이 일찍 떨어지는 조기낙엽 현상이 발생했다.

구례군의 경우 조기낙엽 비율이 90% 이상인 시기가 제주보다 약한 달 빨랐다.

조기낙엽이 이듬해 꽃을 맺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초 낙엽이 4주 가량 빨리 진 개체의 이듬해 가지당 꽃눈 수는 4~7개로 올 4월 기준 조기낙엽 비율이 낮은 개체(15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잎이 빨리 떨어질수록 가지생장률도 평균 26cm에서 12~20cm로 줄었다.

생태원과 구례군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간 구례군 광의교에서 용반초등학교에 이르는 3km 구간 내 왕벚나무 94그루를 대상으로 구멍병 살충제를 살포했으며, 조기낙엽 현상이 2주 기량 지연됨을 확인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꿀따는 꿀벌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 도로에서 꿀벌 한 마리가 꽃망울을 터뜨린 수국에 앉아 꿀을 따고 있다.

## 광주공무직노조총파업 2일차 ‘삭발’ 투쟁 강도 높여

‘퇴직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광주 5개 자치구 공무직노동자들이 삭발을 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광주전남지자체단체공무직노동조합은 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에서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갖고 5개 자치구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어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사측인 지자체와 교섭을 벌였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담당자자 바뀌었더라도 이유로 4년동안 무책임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노조는 임금, 인사, 복

지제도 등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보성보호 복지제도의 경우 구청내 여성직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 5개 자치구는 “공무직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퇴직금 기산제’는 여전상 수용이 어려운 입장이다”며 “열악한 제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제작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기산제가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직노조는 투표 참여 조합원 79.5%가 찬성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남구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으며, 한미애 수석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광양제철소 정전 피해 400억 넘을듯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해 일부 고로(용광로)가 멈췄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만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1분께 광양 신단 내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은 변전소 차단기 수리 과정 중 발생했다.

정전으로 고로에 뜨거운 비밥을 넣어주는 송풍기가 멈춰 제철소 5개 고로 가동이 중단됐고 고로 연료로 투입하는 코크스 공정도 가동을 멈췄다. 그러자 폭발을 막기 위해 굴뚝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자동 작동돼 검은 연기가 수십분 동안 외부로 배출됐다. 화재나 폭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포스코는 전날 오후 1시 4고로에 이어 이날 자정 3고로를 재가동했고, 나머지 3개의 고로는 정밀 점검 후 이날 오후 재가동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전 원인은 파워 증으로 가동을 멈춘 나머지 고로도 안정성을 확보해 오늘 증에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로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양제철소의 하루 쟁률 생산량은 5만6000t인데, 열연제품 가격이 1t당 72~7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보수 비용을 빼고도 매출 손실은 최소 4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 이런판결 저런판결

## 현재 “응급실 난동 처벌 조항 합헌”

“폭행 제재한다고 모든 진료거부 금지 아냐”

응급환자 본인이라도 자신을 진료하는 의료진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협행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복통으로 진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부렸으며,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주사기를 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위반으로 별금 300만원에 악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별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심판제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결 확정 이후인 지난해 2월 현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누구든지’에 응급환자

본인까지 포함하는 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를 원하지 않는 의료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폭행이 아니더라도 협법 범위 내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폭행 등에 의한 응급 진료 방해를 제재한다고 해서 모든 의료진 조치에 수긍해야 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응급환자 모든 행위가 진료 거부나 항의 이유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통념상 용인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이나 일반 행동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포함 누구라도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 위법 목적이 정당하고, 위반 시 처벌도 적합한 수단”이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

## 환경당국,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 735곳 대상 실시

환경당국이 전국 소규모 공공하수도 735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500㎥ 미만인 하수처리시설 중 운영 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735곳을 정밀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뉴스

이번 조사는 2007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개선 실시계획 중 공법개량 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566곳에 대해 주가 서면조사를 벌인다.

뉴스

이에 대해 “퇴직금 기산제”는 여전상 수용이 어려운 입장이다”며 “열악한 제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제작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기산제가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직노조는 투표 참여 조합원 79.5%가 찬성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남구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으며, 한미애 수석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

우리 미처이 있는요…

자체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놓았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경복,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자폐조기발전  
자체치료로 충원 민족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맞춤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통신망 123 |

| 고객센터 1577-1000 |